



자이니치의 해방구에서 공생의 플랫폼으로 -오사카 조선부락-

정 해 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보이지 않는 동네’에서 만든 역사

<p>없어도 있는 동네 그냥 그대로 사라져 버린 동네 전차는 애써 먼발치서 달리고 화장터만은 짹싸게 눌러앉은 동네 누구나 다 알지만 지도엔 없고 지도엔 없으니까 일본이 아니고 일본이 아니니까 사라져도 상관없고 아무래도 좋으니 마음 편하다네</p>	<p>거기선 다들 목청을 돋우고 지방 사투리가 활개치고 밥사발에도 입이 달렸지 엄청난 위장은 כות에서 꼬리까지 심지어 발굽 각질까지 호르몬이라 먹어 치우고 일본의 영양을 몽땅 얻었노라 의기양양 호언장담</p>
---	---

‘보이지 않는 동네’이지만 “다들 목청을 돋우고” ‘활개 치는 씩씩하고 활발한 동네’. 『장편시 - 이카이노猪飼野시집』(1978년)에서 시인 김시종이 표현한

조선부락이다. 재미작가 이민진의 작품 ‘파친코’가 그린 1920년대 오사카 조선부락의 이미지는 열악한 생활공간이었다. 그러나 1920년대 일본 전역의 조선부락은 그저 좁고 더러운 곳에 그치지 않았다. 조선적인 정서와 언어, 교육, 문화를 유지하던 곳이자 경제력을 갖춘 곳이었다.¹⁾

역동성, 해방구. 바로 일제강점기 조선부락의 특징이다. 그리고 전후에는 일본에서 새로운 공생의 사례를 만들어가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본 사회는 다문화공생 정책을 내세우지만 100년 이상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 자이니치(在日)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있다. 타자화, 배제. 일본 사회가 자이니치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참정권과 법적 지위는 일본 사회가 자이니치를 공생의 대상으로 여기는가 하는 점에서 근본적인 의문을 낳는 지점이다. 세금을 내지만 정치적 권리는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선적’이라 불리는 무국적자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모국인 한국의 재일동포 정책도 일본 정부와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재일동포의 존재를 방기했고, 1965년 체결한 「한일기본조약 및 제협정」 중 ‘재일한국인 법적지위협정’을 통해 재일동포 사회의 분열을, ‘한일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에서도 재일동포의 재산과 권리 및 이익을 제외해 재일동포 사회에 소외감과 깊은 상처를 남겼다.²⁾

그런 속에서 자이니치 사회의 아이덴티티는 변하고 있다. 모국지향성 일변도였던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선도 다양해졌다. 영화 ‘Go’에서 볼 수 있듯이 3세부터는 국적이나 민족이 아닌, ‘도쿄인’이나 ‘오사카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간다. 올드커머의 경제력 향상과 함께 뉴커머의 존재는 자이니치 사회의 공생 대상이 확대됨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일제강점기 일본에 형성된 조선부락의 역할과 기능을 토대로 광복 이후 공생의 플랫폼으로써 코리안타운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러 사람이 일본에 가다 - 독일: 도항과 밀항

광복 이전 한인의 독일은, 첫 번째 조선의 개항, 두 번째 1910년 한일강제병합, 세 번째 일본의 총동원체제기에 일본으로 강제동원을 본격화한 1939년 등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표1〉 일본 거주 한인 현황 (단위:명)³⁾

연도	거주 한인수			연도	거주 한인수		
	①	②	③		①	②	③
1882	4			1924	118,152	168,002	172,130
1895	12	12		1925	129,870	187,102	214,657
1896	19			1926	143,798	207,853	247,358
1898	71			1927	165,286	246,515	308,685
1900	196			1928	238,102	341,737	358,121
1905	303	303		1929	275,206	387,901	398,920
1907	459	459		1930	298,091	419,009	419,009
1909	790	790		1931	311,247	437,519	427,275
1911	2,527		5,728	1932	390,543	504,176	433,692
1912	3,171		7,796	1933	456,217	573,896	500,637
1913	3,635	3,952	10,394	1934	537,695	689,651	559,080
1914	3,542	4,176	12,961	1935	625,678	720,818	615,869
1915	3,917	5,064	15,106	1936	690,501	780,528	657,497
1916	5,624	7,225	17,972	1937	735,689	822,214	693,138
1917	14,502	17,463	22,218	1938	799,878	881,347	796,927
1918	22,411	27,340	34,082	1939	961,591	1,030,394	980,700
1919	26,605	35,995	37,732	1940	1,190,444	1,241,315	1,241,315
1920	30,189	40,755	40,755	1941	1,469,230	1,469,230	1,484,025
1921	38,651	48,774	62,404	1942	1,625,054	1,625,054	1,778,480
1922	59,722	82,693	90,741	1943	1,882,456	1,768,180	1,946,047
1923	80,415	112,051	136,557	1944	1,936,843	1,911,307	2,139,143

① 『日本帝國統計年鑑』, 해당연도

② 朴在一, 『在日朝鮮人に關する綜合調査研究』, 東京: 新紀元社, 1957, 23~29쪽

③ 田村紀之, 「內務省警保局調査に依る朝鮮人人口(1)」, 『經濟と經濟學』46, 1981, 58쪽

한인 도일정책은 1910년부터 1939년간에도 일본 경제 상황, 당국의 정책 수립에 따라 여러 차례 변화했다. 그러나 한인의 도일이 합법적인 테두리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이 필요한 기업의 요구는 당국의 정책 방향을 넘어 비합법적 방법을 넘나들었다.

한인의 도일을 활성화한 배경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정기항로 개설이었다. 1876년에 부산과 일본 규슈九州 나가사키長崎 간 정기항로를 시작으로 1880년 원산과 나가사키, 1883년 인천과 나가사키, 1890년 부산과 오사카大阪, 1893년 인천~모지門司~오사카, 1902년 원산~모지~오사카 간 정기항로를 개설했고, 1905년에는 부산~시모노세키 간 정기항로인 부관釜關 연락선이 취항했다.⁴⁾ 1901년에는 부산~경성~신의주를 잇는 철도를 완성했고, 고베와 시모노세키 간 철도 노선을 완성함으로써, 한·일 간 거리를 단축했다. 부관연락선 개설은 신의주~부산 간 한반도 전역과 일본 규슈~간사이關西 간 교통망을 마련했다.⁵⁾

정기항로의 개설은 한인의 도일을 촉진한 배경이기도 하지만 한인의 도일을 활성화한 결과물로 이해할 필요도 있다. 정기항로를 개설했기에 도일이 촉진된 것이다. 관련 연구 성과는 찾을 수 없지만, 일본의 적극적인 조선통치 의지와 조선으로 향하던 일본인을 위한 조치가 아니었을까. 통계를 통해 추측의 실마리를 풀어보자.

통계가 절대적 지표는 될 수 없으나 추이를 살펴보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1905년 부관연락선이 취항한 시기를 기준으로 전후 시기의 거주 통계를 보면, 한인의 일본 거주 인원은 1911년에 급증할 때까지 큰 변동 추이를 찾기 어렵다. 이에 비해 일본인의 조선 거주 인원은 1881년과 1889년, 1895년, 1906년, 1909년, 1911년에 큰 폭으로 늘어났다. 1888년은 오히려 거주 인원이 크게 줄었다.

〈표2〉 한인과 일본인의 거주 현황 (단위:명)

연도	한인의 일본 거주 현황 (일본제국통계연감)		일본인의 조선 거주 현황 (조선총독부 통계 ⁶⁾)	
	인구수	전년 대비 증가 인원	인구수	전년 대비 증가 인원
1876	-	-	54	-
1877	-	-	345	291
1880	-	-	835	490
1881	-	-	3,417	2,582
1882	4	-	3,622	205
1885	-	-	4,521	899
1888	-	-	1,231	-3,290
1889	-	-	5,589	4,358
1890	-	-	7,245	1,656
1893	-	-	8,871	1,626
1895	12	8	12,303	3,432
1896	19	7	12,571	268
1898	71	52	13,615	1,044
1900	196	125	15,068	1,453
1904	-	-	31,093	16,025
1905	303	-	42,460	11,367
1906	-	-	83,315	40,855
1907	459	-	98,001	14,686
1909	790	331	126,168	28,167
1911	2,527	1,737	210,689	84,521
1912	3,171	644	243,729	33,040

〈표2〉의 통계를 정기항로 개설과 연관해 본다면, 한인보다는 일본인 도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식민지 경영에서 자국민의 식민^{植民}은 필수적이었으므로 강제병합 직후부터 일본 당국은 적극적으로 일본인과 기업을 상대로 ‘조선 진출 권유’를 했다. 이들의 조선 진출에 정기항로는 필수 요건이었다. 물론 정기항로 개설은 한인과 일본인 도항의 유일한 배경이 아니라 여러 배경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두 번째 배경은 여권제도 개선이다. 조선 관리가 도일하려는 한인에 대한 여권 발급을 거부함에 따라 한인의 도일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일본기업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문제는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면서 변화를 맞았다. 1906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 통감부령 제34호 「한국인의국여권규칙韓國人外國旅券規則」에 따라 한인의 여권 휴대가 면제된 것이다.⁷⁾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1910년 강제병합 후 한인의 도일은 증가했다. 1910년 이전에 수백 명 단위였던 한인이 수만 명 단위로 급증하자 당국도 체계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조선총독부와 내무성이 중심이 되어 도일과 거주 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했다. 한인 도일 통제 정책의 핵심부서는 내무성이었다. 내무성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경찰과 권업勸業이었다.⁸⁾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해 경찰업무를 장악해야 했고, 일자리를 관장하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실업자의 존재는 사회의 안녕질서를 해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국가와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한 당국의 통제와 관리체제 아래에서 한인은 도일했다. 그러나 모두가 합법의 길을 택한 것은 아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유씨와 약속 시간에 약속한 장소로 나갔다. 희미한 달빛이 비치는 부산 다대포多大浦의 어느 바닷가였다. 파도치는 바닷가 바위 곁에는 백여 명의 장정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가 노동자 밀수업자인 유씨의 알선으로 밀선에 실려 일본으로 팔려 가는 가난한 장정들이었다.”⁹⁾

일본에서 돌파突破로 유명했던 노동운동가 김태엽金太燁이 1915년 열세 살 어린 나이에 밀항하는 모습이다. 1910년대 일본 정부의 밀항 관련 자료는 없다. 그러나 김태엽의 사례를 볼 때 밀항은 1910년대 한인들이 주로 이용했던 방법이었다. 이들이 밀항을 택한 이유는 부관연락선 승선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었다.¹⁰⁾



〈그림 1〉 한복을 입고 오사카 축항에 상륙하는 한인(재일한인 역사자료관, 『재일한인역사자료관 도록 - 사진으로 보는 재일 코리안 100년』, 2008, 15쪽)



〈그림 2〉 경찰서가 발행한 도항증명서, 호적등본에 직인을 찍는 방식으로 발행(재일한인역사자료관, 『재일한인역사자료관 도록』, 10쪽)

자이니치의 해방구, 조선부락

“독자들이여, 나와 함께 다마가와^{多摩川} 벌판에 서 보자. 자갈을 캐는 곳, 내 고향 대구 부근의 하천에서 매일 볼 수 있는 풍경이다. 가까이 있는 산들을 보며 하천을 걷고 여성들의 자갈 캐는 것을 보면서 마치 내 고향 하천에 서 있는 듯 착각하기도 한다. 내가 착각을 일으키는 이유는 이곳의 집들이 마치 조선의 농가와 같기 때문이다. 말은 모두 조선말이고 조선 김치도, 고추도 있다.”¹¹⁾

장혁주^{張赫宙}가 르포에서 묘사한 도쿄 인근 다마가와 하천변과 시바우라^{芝浦} 조선부락의 모습이다. 친일 작가로 살았던 장혁주가 고향으로 착각할 정도로 익숙한 곳, 바로 자이니치의 해방구, ‘조선부락’, ‘조선인 부락’, ‘조선초^{朝鮮町}’다.

일제강점기 일본 각지에는 다양한 성립 배경을 가진 한인 밀집지역을 이루었다. 슬럼 혹은 바락^{部落} 지역이라 불렸던 일본 하층거주지구의 일종이었다.

일본에서 ‘부락^{部落}’은 법적 행정단위명이 아니라 민간에서 사용하던 용어로서 동리^{洞里} 및 정촌^{町村} 이하의 ‘자연마을’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차별적인 용어가 아닌 일반 호칭이었다. 이러한 일반 호칭과 달리 ‘피차별·특수부락’을 약칭한 개념의 ‘부락^{buraku}’이 있다. 도축업 등 특정 직업 소유자의 밀집 지역인 피차별부락과 부락민을 지칭하는 멸칭^{蔑稱}이다.

일제강점기 일본 사회가 한인 거주지역을 지칭하던 ‘조선부락’은 차별적 호칭이었다. 그러나 한인들에게 조선부락은 소중한 공간이었고, 자이니치운동의 터전이었다. 한인들이 저임금과 민족차별 속에서 생존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탄생했다. 한인들은 공터와 하천가 등지에 마을을 형성하고 일자리와 머물 곳을 찾아 모여드는 동포들을 품었다. 우리말과 역사, 풍습 등 민족 정서를 지키며 후세 교육에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일본 패전 후에도 남아 자이니치 사회의 구심점으로 역할하고 있다.

1) 조선부락의 형성 및 분포

돈벌이^{出稼} 노동자로 일본 땅을 밟은 한인에게 시급한 과제는 일자리와 거주지 확보였다. 단신으로 도일한 한인들은 ‘미리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동포들이 운영하는 노동하숙으로 가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을 거친 후 고향의 가족을 불러 세대를 구성했다.¹²⁾

세대를 구성한 한인들이 마련한 터전은 조선부락이었다. 직업 안정성이 취약한 자유노동자 처지였으므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한인 밀집지역이 유리했다. 일본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집을 구하거나 일본인 거주지 생활은 두려운 일이자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도 어려웠다. 한인 노동자의 수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높은 집세와 당국과 사회의 부정적 정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식민지 시기 내내 일본 사회는 한인에 대한 배타적 인식을 유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했다. 배타성에는 주거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포함되었다.¹³⁾

낯선 일본 땅에서 한인들이 갈 곳은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한인들의 손으로 마련한 삶의 터전. 한인들의 취로 사업장(공장이나 공사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조선부락이었다.¹⁴⁾ 한인들은 오사카·교토·도쿄·가나가와·요코하마·규슈 등 주요 도시에 작업장 근처와 빈민지구, 공터 및 빈집, 시장터를 중심으로 조선부락을 형성했다. 가장 급증한 시기는 1930년대였다.

가장 이른 시기에 조선부락을 형성한 곳은 오사카다. 히가시나리구^{東成區} 히가시오바시초^{東小橋町} 157번지 조선부락은 1907년에 탄생했다. 그러나 오사카 최대의 조선부락은 히가시나리구 이카이노초^{猪飼野町}이다. 이카이노^{猪飼野}는 ‘돼지 키우는 마을’이라는 의미다. 최대 거주 한인을 기록한 곳이며, 지금도 4만 명이 사는 대표적 코리안타운이다.

“오사카시 이쿠노^{生野}구의 한 구역이었으나 1973년 2월 1일에 없어진 조선인 밀집지이며 옛 정명^{町名}, 옛날에는 이카이노쓰^{猪甘津}라 했고 5세기 무렵 조선에서 집단 도래한 백제인이 개척했다는 백제향^{百濟郷}의 터전이기도 하다. 다이쇼 말기 백제천을 개수해 신히라노가와^{新平野川}를 만들었을 때 공사를 위해 모인 조선인이 그대로 살게 된 마을, 재일조선인의 대명사와도 같은 동네”¹⁵⁾

재일코리안 시인 김시중^{金時鐘}이 『이카이노 시집』에서 설명한 ‘이카이노’다. 이처럼 오랫동안 한인들의 밀집지였으나 현재 이카이노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인접한 나카가와초^{中川町}, 모모타니 0초메^{桃谷 0丁目}로 통합되었다. 1970년대 주변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1973년 2월 1일 오사카시가 지도에서 지워버린 탓이다.

〈표3〉 1930년대 주요 지역의 조선부락 형성 상황

지역 및 장소	조사시기	부락수	세대수(명)	세대원/인구수(명)	거주한인수 대비(%)
도쿄시	1939	26	1,468	5,740	10.71
요코하마시	1935	14	264	749*	-
교토시	1935	31	862	5,898	14.0
오사카부	1933	109	5,602	29,739	26.6

* 미확인 세대원수 다수 포함

〈자료〉 外村 大, 『在日朝鮮人社會の歴史學的研究』, 東京: 綠陰書房, 2004, 44쪽, 120~130쪽 수정

2) ‘조선부락을 거부’하는 일본 사회

일본 사회는 빈민가를 형성한 조선부락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일본 사회는 부담스럽다는 의지를 집약해 표출했다. 다양한 방법의 추방 시도다. 당국과 일본 사회가 주도한 추방 시도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¹⁶⁾

첫째, 하천 주변이나 해안 등 국유지·사유지의 불법점거, 차지차가(借地借家)에서 추방하는 경우다. 당국의 자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례다. 집주인에 의한 추방과 당국의 행정조치 등이 있다. 둘째, 일본 주민들에 의한 조선부락 철거 요구이다. 일본인 집주인들은 가옥수선 등 여러 구실을 내세우거나 한인들이 ‘잡거생활을 하고 위생풍속사상이 저급’하다는 이유로 퇴거를 요구했다. 셋째, 일본정책과 행정조치에 의한 철거다. 조선부락을 몰아내려는 주체는 지자체와 경찰 등 행정당국이 더 많았다. 당국은 조선부락의 근거지가 국유지임을 내세우고 ‘도시미관을 더럽힌다’는 등 여러 이유를 들어 행정력으로 몰아내고자 했다. 전쟁 말기에 공습에 대응하기 위해 철거하기도 했고, 내무성의 다마가와 자갈(砂利)채취금지령으로 철거한 경우(도쿄)도 있다.

일본 사회의 추방 시도 앞에서 거주권을 지켜야 하는 한인들은 절박했다. 초기에는 사회운동단체를 찾아가 호소하고 일본 차지차가인조합 등 단체의 도움을 받아 소송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다가 독자적인 한인 단체를 결성해 대응했다. 대표 사례는 김문준이 1928년 7월 결성한 오사카조선인거주권회득동맹이다.¹⁷⁾

3) 전전기(戰前期) 조선부락의 역할

조선부락은 한인사회의 큰 버팀목이었다. 조선부락이 있기에 살아갈 수 있었고, 가족을 지킬 수 있었다. 자연과 혈연적 상호부조가 잘 이루어져 취직 등 생활상 편의도 쉽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부락이 있었기에 한인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실천성을 담보한 대중운동이 가능했다. 일본전국노동자협의회나 일본반제동맹 등 혁신운동세력도 조선부락과 한인 학교를 조직화 근거지로 삼았다. 그러므로 당국은 집요하게 조선부락 해체를 시도했다. 그러나 해방 후 한인들은 조선부락이 있던 곳에서 민족교육을 부활하고 재일코리아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¹⁸⁾

(1) 삶의 버팀목을 넘어 합법운동의 근거지로

조선부락은 도일한인들에게 단순한 주거지를 넘어 실질적인 삶의 터전이였다. 혈연과 지연으로 똘똘 뭉친 곳이었으므로 고향을 옮겨놓은 듯한 생활 공동체였다. 돈이 없어도 굶어 죽지 않고,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었다. 또한 미래를 꿈꾸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었다. 이곳을 터전 삼아 행상인이나 노동자에서 자영업자로 성장하는 이들이 늘어났고, 1930년대에 상공업과 서비스업을 펼쳐 경제적으로 성공한 한인들도 등장했다.¹⁹⁾

조선부락은 한인들에게 다른 지역 동포들의 삶과 고향을 돌아볼 여유를 갖게 해주었다. 조선부락이 중심이 되어 수해와 기근 및 각종 재해에 대한 의연금을 모금하고, 고향에 필요한 도로나 상하수도 설치까지 담당했다.²⁰⁾ 지연과 혈연의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조선부락의 부조 기능은 1920년대 후반 각종 협동조합 결성과 관련 있다. 1920년대 중반까지 조선부락의 주요한 경제 기능은 공동구매나 계^계 형태가 담당했다. 1920년대 후반 결성되기 시작한 소비조합이 조선부락을 연계한 조직으로 확대되면서, 협동조합은 비중 있는 경제 활동의 주체가 되었다.²¹⁾ 소비조합은 1930년대 후반에 들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²²⁾

소비조합에 대한 한인들의 호응도는 높았다. 생활상 편리함이 컸기 때문이다. 소비조합 활동에서 공동구매는 큰 도움을 주었다. 민중시보 제4호(1935년 8월 15일자) 기사에서 공동구매를 강력히 추천했다. ‘열집식 스무집식 공동으로 삽시다’ ‘누가 물건을 사다가 난와 줄 것인가’ ‘외상으로 사는 것은 큰 손해다’는 소제목에서 알 수 있듯 공동구매의 요령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²³⁾

한인사회의 특징을 드러낸 협동조합은 동아통항조합^{東亞通航組合}이다. 동아통항조합은 제주도와 오사카를 왕래하는 한인의 편익을 위해 오사카 한인들이 결성한 선박협동조합이다.²⁴⁾ 그러나 한인들의 호응에도 동아통항조합의 운영은 순조롭지 못했다. 경제적 어려움, 선박 좌초와 지속적인 당국의 방해와 탄압 등으로 1934년 2월 문을 닫았다.²⁵⁾

조선부락의 생활공동체 역할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는 진료소 운영이다. 조선인무산자진료소^{朝鮮人無産者診療所}는 오사카 거주 한인들이 언어가 통하는 한인 의사에게 치료받기 위해 만든 의료조합이다. 그동안 한인 진료는 조선부락 내 한약방에서 담당하고 있었는데, 외과 수술 등은 한약방이 치료할 수 없었다. 한인들은 위험하고 위생시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었으므로 사고와 질병 위험이 높았다. 종종 발생하는 일본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는 한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것이 진료소다. 1930년 1월 초 오사카의대 출신의 정구충^{鄭求忠} 등이 ‘실비 진료소^{北區 吉山町}’를 개설하기로 하고 한인 의사와 간호사를 갖추고 2월에 개업했는데, 개업 당일부터 60여 명이 몰려 성황을 이루었다. 그러나 역시 경찰의 폐쇄 명령으로 1931년 8월 13일 문을 닫았다. 당국의 폐쇄 이유는 허가 위반이었으나 실제 이유는 ‘진료소라는 이름을 내걸고 조선독립기념일에 격문을 뿌리고, 이익금으로 한리아동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등 민족운동을 했기 때문’이다.

이같이 1930년대에 더욱 활발히 전개된 소비조합이나 동아통항조합, 진료소 운영은 조선부락의 상호부조 활동에 바탕을 두고 출발해 조선부락 간 연계조직으로 운영했다. 소비조합을 통해 조선에서 재배한 배추를 동아통항조합 소속 선박으로 실어와 김장을 할 수 있었고, 일본어를 몰라도 진료소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다. 국내 수재나 화재를 당한 다른 지역의 동포들을 구제하는 일도 소비조합의 역할이었다. 이들 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역할만 하지 않았다. 제일코리안운동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고 조선 및 일본 운동단체와 공동전선을 취하며, 합법운동의 창구 역할도 병행했다. 그러므로 당국의 탄압을 피할 수 없었다.

(2) 조선부락,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지키는 울타리

“때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향수에 사로잡히게 되는 때에는 대개 간다(神田)의 조선 식당에라도 찾아간다. <중략> 거기서 동포들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거나 신나게 떠드는 소리를 듣거나 하게 되면 때로 나도 모르게 웃고픈 마음이 생긴다. 눈물이 흐를 정도로 희열 속에 잠긴다. 저 장난 섞인 야유. 그 조선말을 듣는 기쁨을 가득 안고 돌아온다. 어느새 울음이 터져 나온다.” - 김사량의 ‘고향을 생각한다’ 중에서.²⁶⁾

조선부락은 ‘고향’이었다. 고향 정서를 갈망했던 작가 김사량은 동포의 모습을 찾아 ‘웃고, 조선말을 듣는 기쁨’을 느끼며 향수병을 이겨냈다.

1930년대 오사카 고바야시초^{小林町} 조선부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최석의^{崔碩義, 1927년생}가 회상하는 조선부락은 “소란이 그치지 않는” 거친 곳이었다.²⁷⁾ 거칠고 무질서했으나 ‘해방구’였다. 문자 그대로 ‘조선인 마을’이었다. 일본어도 제대로 모른 채 일터에서 옥죄었던 긴장감을 풀고 거리낌 없이 설 수 있는 곳이었다. 일본이면서 일본인들의 세계와 떨어진 곳이었다.

“밤은 별세계였다. 밀조한 막걸리가 있고 마늘과 고춧가루를 넣은 김치가 있고 술이 취하면 고향의 민요가 흘러 나왔다. 일본의 학정을 한탄하는 청춘가가 나오면 아리랑, 도라지, 노들강변, 소상팔경, 춘향가 등 아는 노래 전부가 흘러나와 저녁 여섯 시부터 시작된 술자리가 새벽 두세 시까지 이어지는 일도 많았다.”²⁸⁾

조선의 어느 농촌과 다를 바 없는 ‘조선적’ 모습이다. 그러므로 조선부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한인들에게 ‘풍부한 민족 색채’는 자연스러웠다. 정월이나 추석이면 화려한 민족의상을 입고 나들이를 했다. 여성들이 길고 술이 많은 머리를 곱게 쪽을 지어 올리고 가는 모습은 장관이었다.²⁹⁾

“일상생활의식부터 관혼상제의식에 이르기까지 모국의 관례가 오로지 중시되었다. <중략> 이 모든 것은 모국의 습관이기 때문이다. 얼핏 보아 완고하게 비치는 사람들의 태도에는 민족의 전통을 존중하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고집하는 절실한 심정이 나타나 있었다. 나아가 잃어버린 모국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만회할 수 있는 그날을 남몰래 기다리는 희망이 배어 있었던 것이다.”³⁰⁾

김태생^{金泰生}에게 모국의 관례는 습관이나 생활상의 편의만이 아니라 ‘민족의 전통을 잊지 않으려는 절박함과 모국의 역사를 만회할 그날을 기다리는 희망’을 담은 숭고한 행위였다. 한인 대부분이 김태생과 같은 생각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부락이 없었다면, 당국의 동화정책은 막힘없이 추진되었을 것이고, 김태생과 같은 한인들이 ‘희망’을 품기 어려웠을 것이다.

조선부락에서는 우리말과 우리 문화가 통용되었다. 민족적 아이덴티티는 교육을 통해 이어졌다. 나라는 없어도 조선말은 한인의 모국어이자 일상어였다. 모국어가 갖는 힘은 소통 이상이다. 민족이라는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고 가치를 번성하게 만든다. 작가 김사량이 조선말을 듣기 위해 찾아 헤맨 결과 얻은 것은 고향만이 아니었다. 당국의 강요로 황군위문행사를 다녀야 하는 현실에서 연안의 조선의용대를 찾아가는 용기도 얻었다.

조선부락의 우리말과 우리 문화는 열악한 여건이 나은 산물이기도 했다. 학령대상아동은 증가하는데, 일본학교에 보낼 수 없는 처지의 한인들이 자체 교육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견지한 문화였기 때문이다. 당시 기류부에 등록되지 않는 한인들은 아동을 취학시킬 수 없었고, 경제문제로 아동들이 노동현장을 지켜야 했으므로 정규 교육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한인사회는 이들 미취학 아동의 교육을 방치하지 않았다. 1920년대부터 조선부락 부근에 야학과 학원을 설립해 우리말과 역사를 가르쳤고, 한인노동조합도 조선부락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를 운영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우리말은 조선부락에서 일상어로 확고한 위치를 가졌다.

이러한 전통은 일본 패전 후에 민족학교로 이어졌다. 1982년에 재일본

대한민국청년회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광복 당시 귀환하려 한 동포들은 67%였으나 다수가 정주를 택해야 했다. 일본의 방기와 모국의 정치 경제적 혼란으로 인해 발생한 정주이다. 그러나 귀국에 대한 희망은 버리지 않았으므로 해방 이전부터 있었던 교육의 전통을 이어 1945년 9월부터 노천교실에서 등사판(謄寫版)으로 만든 교과서로 민족교육을 시작했다. 1948년에 학생이 6만 명에 이를 정도로 왕성했다. 당시 한인 아동의 취학률은 100%였다고 한다. 1948년 1월 GHQ의 통달과 일본 정부의 탄압으로 전국 200여 개에 달하던 학교는 강제 폐쇄를 당했으나 5월에 타협이 이루어져 현재까지 민족 학교와 민족학급을 이어가고 있다.

조선부락에서 조선적인 생활과 풍습은 자연스러운 삶이었고 주류였다. 그러나 식민지 본국인 일본 땅에서 한인들의 이러한 ‘조선적 삶’은 당국의 정책과 정면으로 맞서는 행위였다. 한인들의 조선적 풍습은 동화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조선부락에서 사용하던 언어와 풍습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당국은 내선협화회(1924년) → 교풍회(1935년) → 협화회(1936년)으로 이어지는 통제조직을 통해 한인의 민족적 정체성을 말살하고자 했다.

오사카 히라오카(平岡)에 살며 지퍼공장에 다니던 박윤경은 출근길에 경찰서가 있었다. 하얀 조선 옷을 보면 먹물을 쏟았기 때문에 경관이 있으면 멀리 돌아가고 없으면 뛰어서 지나갔다. 공장에서 복장을 단속하는 일도 있었다. “정신없이 일하고 있으면 말이야. 단속이 들어와. 저고리를 면도칼로 찢는 일도 있어. ‘기모노 입어!’라면서 말이지. 조선 옷은 금지였어.”³¹⁾

조선적 관습을 유지하려는 한인에 대한 당국의 단속과 탄압은 집요하고 다양했다. 이같이 조선부락은 주거문제와 생존권 해결을 위해 탄생했지만, 주거문제 해결이라는 의미를 넘어섰다. 밀집이라는 특성을 토대로 우리말과 풍습을 유지하면서 민족적 아이덴티티 유지로 이어졌고, 민족공동체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1930년 한인 단체의 해산으로 자이니치운동의 지형이 다각화한 후 자이니치운동에서 조선부락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한인의 생활터전으로써 교육적 기능까지 담당했던 조선부락은 1930년대 자이니치운동의 토대로 작용했다.

광복, 공생의 플랫폼을 향해

1) 자이니치 사회의 경제적 안정

(1) 1930년대 말 증가하는 자영업

한인의 대부분은 도일 후 고향과 전혀 다른 경험 세계에 들어섰다. 대부분 농민 출신이었으나 도일 후 대부분 노동자의 삶을 살았다. 노동자는 1910년대 이후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재일 한인의 직종이 되었다. 그러나 시기가 지남에 따라 노동자 비율은 감소하고 상업 종사자는 높아졌다.

조선일보에 게재한 명함 광고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전국 1,178건의 재일 한인 사업주들은 금속기계 등 제조업과 판매업, 하숙업, 각종 상점, 한방약국, 이용업, 보험대리점, 운수업, 변호사나 행정서사, 서비스업, 신문 보급소 등 다양한 업종을 경영하는 자영업자였다.³²⁾

자영업은 조선부락을 토대로 활성화되었다. 당시 조선부락 거주자들의 회상에 의하면, ‘조선부락의 도로가에는 쌀집, 잡화점, 생선가게, 건어물점, 한복집, 이발소, 세탁소, 각종 음식점, 과자점, 금은방, 김치나 미역 등 소매업 가게, 한약방, 철공소, 목재소, 폐품처리장 등이 즐비’했다.³³⁾

자영업자의 증가는 한인 노동자들의 직업 전환과 무관하지 않다. 이 가운데 주목할 정도로 상승세를 보이는 직종은 상업이다. 상업은 1935년부터 10%를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1940년 상업 세부 직종 가운데 ningmajui가 8.29%에 차지하는 점은 특이하다. 1930년대 중반 조선부락에 자리한 고물상(폐품처리장) 때문이었다. 당시 조선부락에서 “수백 명이나 되는 하얀 옷을 입은 여성들이 등에 어린이를 업은 채 노천 고물상(폐품처리장)에 늘어

서서 소각 대상과 재활용 대상을 구분해 금속과 철선, 유리 등을 골라내는 모습은 장관”이었다.³⁴⁾

〈표4〉 광복 이전 재일 한인 직업 구성비³⁵⁾ (단위 : %)

직업		1920년	1925년	1930년	1935년 ³⁶⁾		1940년
	관공리·사무·전문직*	0.42	0.19	0.17	유식적 직업	0.35	0.56
	농업	1.21	1.51	0.85	1.07		1.26
어업		-	-	-	0.10		0.06
상 업	각종 행상	0.01	-	-	-	노점 · 행상	1.32
	넝마주이	-	-	-	-		8.29
	각종 상업	0.33	-	-	-		-
	보통 상인	-	-	-	1.49		1.64
	인삼·과자류 ·잡품	-	-	-	2.32		-
	기타 잡업	-	-	-	6.37		-
	소 계	0.34	1.68	5.70	10.19		11.26
노 동 자	토공*	16.66	-	-	토건	24.82	23.58
	탄광산 탄갱부*	22.09	9.67	5.38	광업	2.81	12.73
	각종 고용인*	3.40	6.71	5.88	섬유 ³⁷⁾	10.59	6.74
	각종 직공*	26.47	22.85	21.62	금속· 기계	6.56	7.77
	일용직·인부*	20.54	52.67	58.35	화학	10.93	7.87
	운수·교통	-	0.55	0.55	-		-
	수상(水上) 취업자	-	1.63	1.49	-		-
	소 계	89.16	94.09	93.26	82.82		81.85
요리점 및 하숙업*	0.13	0.77	-	접객업	1.62	0.80	
토건청부	0.71	-	-	-		-	
예창기(藝娼妓)	-	0.14	0.02	-		-	
기타 유업자	8.03	1.62	-	3.87		4.18	

* : 1935년 이후 유업자는 해당되지 않음

특히 상업 종사자 가운데 행상이 한인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컸다. 단지 물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고국이나 외부의 소식을 전해주거나 도서대여점의 역할까지 했기 때문이다. 한인들은 행상을 통해 책을 사거나 빌릴 수 있었다. 행상을 통해 구한 춘향전, 심청전 등 고전이나 이광수의 소설과 같은 신간 서적은 단지 오락물에 그치지 않았다. “저녁이면 평상에 모여 행상인을 통해 구한 한글본 소설을 서로 돌려가며 읽기도 했다.”³⁸⁾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인들은 자연스럽게 우리말과 조선 문화를 공유할 수 있었다.

〈표4〉에서 1920년과 1940년 외에는 행상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없다. 1930년대 한인의 정주화가 강화되면서 행상의 일부는 노점상이나 자영업으로 전환되었다. 1940년 통계에서 행상이라는 직종은 노점과 함께 분류되었다.



〈그림 3〉 1920년대 엿을 파는 고학생들
(재일한인역사자료관,
『재일한인역사자료관 도록』, 32쪽)

행상이나 노점상은 큰 자본금 없이도 가능했으므로 한인들의 일본 정착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 ‘떡’이나 ‘엿’ 등 행상을 한 고학생도 많았다. 가가 호호 방문하는 행상의 특성은 도일 초기 한인이 일본의 다양한 면과 만나는

경험이자 인식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1930년대에 정착한 한인 상점은 조선부락과 한인사회를 지탱하는 데 중요한 순환 구조 역할도 담당했다. 노동자였던 한인들이 상업이나 제조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면서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인 세계가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 광복 이후 자이니치의 직업생활

광복 후 한인들은 당국의 정책으로 귀국을 보류하고 잔류했다.³⁹⁾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한 1945년 8월 이후 1946년 3월까지 남한으로 귀국자는 약 94만 명이고, 1950년까지는 약 100만 명에 달한다. 현재 자이니치 사회의 원점을 형성한 인원은 1947년 12월 말 기준 외국인 등록자 639,368 명이라 할 수 있다. 1992년 기준 자이니치의 수는 668,144명이다.⁴⁰⁾

1950년대 자이니치의 통계를 보면, 1950년 544,903명(외국인 총수 대비 91%)이고, 1952년 535,065명, 1954년 556,239명, 1955년 577,682명, 1958년 611,084명, 1959년 607,533명, 1960년 581,257명(외국인 총수 대비 89.3%)이다.⁴¹⁾ 1954년에 1952년 대비 21,174명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6.25전쟁으로 인한 ‘선회(旋回) 도일’이라 부르는 ‘역밀향’의 결과로 보인다.

<표5> 1952년 10월 기준 한인 직업 구성비 (단위 :명/%)

직업	합계(%)	직업	합계(%)
농업	10,156(1.8)	무역업	163
공업	24,573(4.6)	광업	53
상업	31,023(5.8)	어업	801
운수업	5,266(0.9)	지적노무자	7,237(1.3)
토건업	19,991(3.7)	일용노무자	35,585(6.6)
요식업	5,157(0.9)	실업자	13,269(2.4)
유흥업	7,207(1.3)	무직자	328,624(62.0)
해운업	612	기타	46,084(8.5)
합계		535,803(100)	

1950년대 초 직업별 분포를 보면, 해방 이전과 차이는 업종의 다양화이다. 해방 이전이 노동자와 상업이 다수를 차지했다면, 비중은 작지만 1952년에는 해운업과 무역업 등 새로운 업종을 볼 수 있다. 강재언과 김동훈의 연구에 따르면, 도쿄도와 오사카부 등 지역에 따른 업종별 분포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쿄도는 파친코, 불고기 식당, 소비자금융업, 플라스틱제조업,再生资源, 도매업의 순서로, 오사카는 플라스틱제조업, 금속제품과 기계기구 제조업, 토건업, 음식점, 파친코의 순서로 비율이 높다.⁴²⁾

(3) 올드커머 기업과 뉴커머 기업의 성장

현재 자이니치 사회는 크게 올드커머와 뉴커머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계는 명확하지 않다.⁴³⁾ 일반적으로 일제강점기 도일자 및 1950년대까지 주로 제주도 출신자를 중심으로 한 ‘밀항’을 통한 도일자를 올드커머라 한다면 뉴커머는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정식 허가를 얻어 도일해 공식 체류 허가를 받은 한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올드커머와 뉴커머에 대해 분절적으로 분석하는 경향도 있으나 현재는 분절점은 희박하다.⁴⁴⁾

〈표5〉에서 자이니치의 새로운 업종은 일본 패전 직후 혼란 속에서 성장한 올드커머 기업을 포함하고 있다. 올드커머 기업은 각지의 파친코 산업 등 다양하지만 대표 기업은 1948년 창업한 (주)롯데와 소프트뱅크를 꼽을 수 있다. 신격호가 일본에서 식품업계를 일으켜 성공한 후 한국에 진출해 한국 재계 10권 내의 재벌기업으로 성장한 데 비해, 손정의는 1978년 미국에서 유니스월드를 창업한 후 1981년 일본에서 소프트뱅크를 창업해 일본의 미성숙업체인 컴퓨터 소프트 유통업과 IT업 분야를 선도했다.⁴⁵⁾ 이들 올드커머는 차별과 배제의 일본 사회를 경험하면서 일본인 이상으로 적극적인 일본인화를 수용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⁴⁶⁾

뉴커머는 1980년대 이후 약 20만 명 정도로 비중이 높고, 2016년에는 뉴커머 출신이 도쿄상공회의소 회장에 취임할 정도로 ‘재일코리언 기업’에서 자리 잡았다. 뉴커머를 자이니치에 포함할 수 있는가에 대해 자이니치

사회에서도 논의가 있었으나 2천년대 이후 도쿄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뉴커머를 자이니치 범주에 포함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뉴커머 기업은 올드커머와 같이 대규모는 아니다. 대표적인 뉴커머 기업은 도쿄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낸 에이산^{Eisan} 면세점 대표 장영식^{張永執}이다. 1993년 도일한 장영식은 아르바이트와 행상에서 시작해 1995년 전자제품 판매회사를 설립했다. 그가 당시 주로 한인들이 주력하는 파친코나 식당이 아닌 가전 제품 유통업을 시작한 이유는 면세점이 일본의 틈새시장이라는 점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도쿄국제대학 대학원 유학 중 창업한 이동재팬의 김효섭^{金孝燮} 대표, 일본대학 경제학부 출신의 테크노피아 박재세^{朴載世} 대표, 유학생 신분으로 도일한 국제익스프레스 나승도^{羅勝道} 대표 등도 성공한 뉴커머 기업가이다.⁴⁷⁾

2) 공생의 플랫폼 - 코리안타운

(1) 조선부락에서 코리안타운으로 - 오사카를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일본의 코리안타운이라고 하면, 도쿄의 신오쿠보와 오사카의 이쿠노구를 떠올린다. 신오쿠보가 뉴커머 중심이라면 이쿠노구는 올드커머의 집거지로 구분할 수 있다.⁴⁸⁾ 이쿠노구의 역사가 조선부락의 역사와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쿠노구는 현재 가장 많은 자이니치가 거주하는 집거지이기도 하다. 2018년 현재 가장 다수의 자이니치가 거주한 지역은 오사카시이다. 오사카시가 공개한 2018년 3월말 현재 총 외국인 131,949명 가운데 한국·조선적(무국적)은 67,454명(51.1%)이고, 이 가운데, 이쿠노구에서 한국·조선적(무국적)은 외국인 거주자의 81.4%를 차지하고 있다.⁴⁹⁾

오사카에서 이쿠노구의 코리안타운은 ‘섬’이라고 불렸다. 접근성이 떨어진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 외진 곳이 지금은 연간 2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있으며, 유튜브에서 ‘코리안타운 찾아가는 길’이 있을 정도로 일본 젊은

이들의 핫 플레이스가 되었다.

이쿠노구의 코리안타운은 미유키도리(御幸通り) 상점가, 쓰루하시(鶴橋) 국제시장, 이마자토신지(今里新地)이다. 이 세 곳에서도 가장 연원이 깊고 조선부락과 직접 관련을 맺은 곳은 미유키도리 상점가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한인들이 시장을 형성한 곳은 현재 미유키도리 상점가가 아니라 상점가에서 남쪽으로 100미터 정도 내려간 골목이다. 이곳에서 김치나 나물, 고무신 등을 판매하면서 시작했다. 현재 상점가는 미유키도리신사(御幸森天神宮)로 가는 신사길이다.

1926년에 신사 앞 산도(参道)에 오사카시립 쓰루하시 공설시장을 개설한 후 쓰루하시역과 이쿠노역을 개통하면서 시장은 미유키도리 상점가로 번성했는데, 물자통제와 1945년 6월부터 시작된 연합군 공습으로 유지할 수 없었다. 일본 패전 이후에도 일본인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적어 상점가가 빈집으로 남게 되자 1948년경에 아래 골목에서 장사하던 자이니치가 입주하면서 현재 조선시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⁵⁰⁾ 1951년 한인 상점주의 진출이 늘어나자 거부감을 가진 일본인 상점주가 주도권을 잡으려 했으나 상점가가 세 군데로 나누어지면서 중앙 상점가는 자이니치 중심의 상점가로 특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코리안타운’이라는 이름은 1993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상점가에 ‘백제문’이라는 게이트를 세우게 된 것은 공설시장의 쇠락 때문이었다. 슈퍼마켓 등 대형 점포의 진출로 일본 각지에서 상점가가 쇠퇴하면서 미유키도리 상점가도 1988년 공설시장 기능이 폐지되자 상점가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코리안타운 구상이 추진되었다. 중심 추진세력인 자이니치 청년단체와 일본인 청년단체들은 지역 재생을 위해 공동으로 구상을 제창하고 오사카시의 행정지원을 받아 1991년부터 구체화되었다. 1993년 게이트 설치 후 이 상점가를 중심으로 주변 일대에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온 자이니치나 뉴커머가 늘어나면서 이쿠노는 자이니치의 집거지가 되었다.⁵¹⁾

오사카의 코리안타운은 단지 상업지구 기능만이 아닌 문화체험과 친선교류의 공간으로서 이미지에 많은 변화를 도모한 곳이기도 하다. 재일코리안

청년들을 중심으로 각종 기념 강연회나 공연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일본 사회에 한국의 전통문화와 예술을 발신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교류의 장이자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1994년 3월에 개최된 ‘이쿠노민족문화제(生野民俗文化祭)’를 비롯해 2009년부터 ‘이쿠노 코리아타운 공생축제’를 매년 11월에 3개 상점가 연합으로 개최함으로써 다문화공생과 문화융합의 메카라는 이미지 표상에 노력하고 있다. 즉 이쿠노 코리아타운은 다문화공생과 문화융합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⁵²⁾

또한 이곳은 민단과 총련의 각 지부들, 교회와 한국계 불교사찰 등 종교 시설, 재일 고령자 시설, 민족학교 등이 점점이 퍼져 있는 곳이다. 울드커머와 뉴커머, 중국 조선족, 귀화한 자이니치 등 저마다 다른 배경을 지닌 코리안들이 경제활동을 비롯해 문화, 교육, 정보 교환, 민족마당이나 축제, 관혼상제에 이르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21세기 자이니치 세계의 핵심을 이루는 관습이나 문화를 지키는 곳이다.⁵³⁾

(2) 험한, 한류 그리고 공생 : 한류에 가려진 공생인가

1959년 12월부터 시작한 ‘귀국사업(북송사업)’이 1984년 8월 종료된 후 자이니치 사회에서 일본 사회와 공생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총 93,340명에 달한 북한행 자이니치의 집단적 행렬이 멈춘 후 이제는 한반도가 아닌 일본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생을 지향한 주체는 자이니치만이 아니었다. 일본 정부와 일본 사회에게 다문화공생은 시급한 아젠다였다. 1980년대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인구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일본의 외국인등록자는 급증했다. 일본 법무성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외국인등록자 2,232,189명은 1986년 말에 비해 162.4% 증가한 규모였다. 이와 함께 일본 인구의 감소도 다문화공생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 이유가 되었다. 연평균 인구증감율이 2016년 -0.32%에서 2020년 -0.47%로 감소했고,

2060년에는 -1.16%라는 높은 감소율이 예상된다.⁵⁴⁾ 일본 인구의 감소는 일본 사회가 다문화공생에 대해 인식을 달리해야 할 상황을 맞았다.

일본의 외국인 거주자 정책이 나타난 것은 1970년대 이후 자이니치에 대한 일본 지역사회의 주민정책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주민정책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마련된 ‘지방공공단체의 국제교류 양상에 관한 지침’, ‘국제교류를 위한 지역 만들기 지침’, ‘지역국제교류추진대강의 시책에 관한 지침’ 등의 지침을 통해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외국인 노동자와 거주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본 정책과 계획 수립을 보다 체계화하고 종합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가와사키시^{川崎市} 남부의 자이니치 집주지역인 사쿠라모토^{櫻本}의 가와사키교회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공생 실천이다.⁵⁵⁾

그러나 일본 사회가 지향하는 다문화공생과 자이니치의 공생이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이니치 형성이라는 역사적 배경이 가장 큰 허들이다. 자이니치 사회 자체가 한반도의 분단 현실과 거리를 둘 수 없다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

공생은 자이니치가 일본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자이니치 사회에서 뉴커머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올드커머 사회는 뉴커머 사회와도 공생해야 한다. 이 같은 자이니치 사회에 한류는 공생의 긍정적인 요소이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문화 개방정책은 무분별한 일본문화가 쇄도할 것이라는 국내의 우려와 달리 일본에 한류의 문을 열었다. 1990년대부터 일본과 중국에서 드라마와 영화, 대중가요, 애니메이션, 게임 등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한류는 2003년 방영한 드라마 ‘겨울연가’를 통해 본격화되었다.⁵⁶⁾

한류의 확산은 한일 양국의 문화적 교류에 기여하고 일본 사회에서 일본인의 한국인 호감도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쳤다. 한류가 시작된 1998년부터 2004년간 일본 여론조사는 ‘한국에 대해 친근감을 느낀다’는 항목이 37.9%에서 증가해 56.7%까지 상승했다.⁵⁷⁾ 그러나 이와 함께 나타난 현상이 혐

한류이다. 혐한류는 2005년 출간한 야마노 샤린(山野車輪)의 『만화혐한류(マンガ嫌韓流)』를 계기로 인터넷 공간에서 민족배외주의와 인종차별주의를 표방하는 행동으로 이어졌다.⁵⁸⁾

자이니치의 공생은 한류에 가려진 공생인가.

여전한 자이니치 기피증과 배외주의적 선동(헤이트스피치) 속에서도 지역 차원에서 공생을 위한 노력은 속도를 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오사카 미유키도리 상점가의 모습이다. 이곳에 일본 젊은이들이 폭발적으로 몰려드는 현상은 가능성의 하나이다. 가능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는 미유키도리 신사(御幸森天神宮)이다. 이 신사는 약 400년경(1,600년 전)에 세운 신사로써 오사카(구 지명 難波)에 도읍을 정한 닌토쿠(仁徳) 천황과 관련해 유서깊은 곳인데, 다문화공생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곳이다.⁵⁹⁾ 이 신사에는 닌토쿠 천황 시절 백제의 왕 인박사가 닌토쿠 천황 치세의 번영을 기원하며 지은 노래비 ‘나니와즈(難波津)의 노래’가 있다. 일본어와 한글로 새겨져 있어 일본에서 유일한 일본어와 한글 병기 노래비이다. 한글이 들어간 이유는 에도 시대에 이 노랫말을 대마도 통역관이 한글로 번역해 조선통신사에게 증정했기 때문이다. 2009년에 현지의 일본인과 재일동포들이 건립위원회를 구성해 노래비를 건립했다.⁶⁰⁾



〈그림 4〉 노래비 귀부(2023년 3월 촬영)

노래비의 건립은 일본 지역사회가 오사카 자이니치를 공생의 대상으로 인정한 사례이다. 공생하려는 양측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백제 시절에 백제계가 일본 땅에서 지은 노랫말이 조선통신사라는 교역의 역사를 통해 한글로 번역되고, 이후 일본 사회에서 일어난 공생의 움직임 속에서 자이니치와 일본 시민들에 의해 탄생했다는 점에서 노래비 건립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참배길인 산도를 상점가로 사용하게 한 신사 측에서도 공생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국민의 논리’를 넘어

1995년은 무라야마 담화가 나온 해이자 하시모토^{橋本大二郎} 고치현^{高知縣} 지사가 “재일한국 조선인들의 공무원 진출 문호 개방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발언이 나온 해이며, 최고재판소가 헌법 판단을 한 해이기도 하다. 공무담 임권이나 지방참정권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이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자이니치 처우 문제는 ‘주민’이나 ‘시민’의 범주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변화는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여전히 미흡하다. 그러나 조선부락이었던 코리안타운은 공생의 플랫폼으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과제가 있다. 가장 큰 과제는 참정권과 법적 지위 문제이다. 교육권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이다. 민족교육을 받을 권리는 인류가 누려야 할 기본권 가운데 하나이지만 여전히 일본학교에서 민족교육의 기회는 제한적이며, 민족학교에 대한 일본 사회의 시선이나 재정적 부담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자이니치에 대한 한국 사회의 몰역사적 시각도 해결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광복 후 자이니치 사회는 한반도 분단 여파를 동시에 겪고 있다. 그들에게 총련이나 민단이라는 구분은 큰 의미가 없으나 한국 사회의 인식은 분절적이다. 올드커머와 뉴커머에 대해서도 분절적으로만 인식한다. 한국 사회의 이러한 인식은 여전히 자이니치 사회를 국적과 국민의

범주에 가두어 둔 결과라고 생각한다.

2023년 3월, 월요일인데도 미유키도리 상점가는 일본 젊은이들로 발을 내딛기 힘들 정도로 붐볐다. 역사 문제와 무관하게 한류를 경험하기 위해 온 이들도. 이 현상을 올드커머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금은 역사라는 무거운 주제를 정면으로 대하지 않지만 향후 정면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1991년 일본의 침략행위를 ‘엄중하게 반성한다’는 가이후^{海部俊樹} 총리의 싱가포르 연설 이후 1990년대 내내 일본 사회는 식민지배의 반성과 가해자로서 자각이 국민적으로 널리 공유되었다. 이와 함께 ‘국민의 논리’를 넘어선 글로벌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그러나 일본의 ‘과거사 반성’이 일본의 ‘근대’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일본인의 정체성의 혼란으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한 위기감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비롯한 일본의 신우익 결속을 낳았다. 글로벌화에 따른 타자의 수용은 항상 타자에 대한 반발과 서로 얽혀 착종된 기류를 만들어낸다.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경제의 장기 침체도 낡은 내셔널리즘의 소환에 역할을 했다.⁶¹⁾

자이니치. 일본에 살고 있는 한인. 단일 국적주의와 혈통주의라는 사고방식에서 변경에서 있는 존재들이다. ‘국민’에 대한 획일적인 시각을 전제로, 국적의 구분에 따라 일본이나 본국이나, 또는 남쪽 정부나 북쪽 정부나 하는 선택에 내몰렸던 시간이 적지 않았다. 그러기에 이런 틀을 비틀 수 있는 역할도 가능한 존재들이다. 엄혹한 일제강점기에 해방구로 자리했고, 광복 후 타자화와 배제가 공고한 일본 사회에서 경제력을 키우며 공생의 길을 도모하는 자이니치 사회이므로, ‘국민의 논리’를 넘어 글로벌한 세계를 열어가는 역할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소개〉

정 혜 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연구위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식민지 시기 재일 조선인의 역사를 주제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5년부터 구술사(Oral History)를 시작했고, 1999년부터 기록학(Achival Science)도 공부했다. 현재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연구위원이며, 역사에 관심을 가진 이들과 함께 국내외의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을 찾고 있다. 『항일과 친일의 재일코리안운동』(도서출판 선인, 2021),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연표』(도서출판 선인, 2018), 『우리지역의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 활용 - 방안과 사례』(도서출판 선인, 2018), 『일제강제동원 - 이름을 기억하라』(사계절, 2017), 『터널의 끝을 향해』(도서출판 선인, 2017), 『일본 제국과 조선인 노무자 공출』(도서출판 선인, 2011) 등 저서와 논문 40여 편을 발표했다.